

개발협력 정책과 이슈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의 성과와 한국 ODA의 과제

부산총회 배경 및
목적

파리선언의 결과 및
평가

부산총회 결과문

부산총회의 성과

부산총회의 한계

한국 ODA에 대한
시사점

이번 부산총회의 결과문은 원조를 넘어선 포괄적 개발협력 방안을 주요 의제로 한 정치적이면서도 행동지향적 합의문이라 할 수 있다. 본 정책과 이슈 3호에서는 부산총회 논의의 바탕이 된 파리선언 이행결과를 간단하게 요약하고, 부산총회에서 합의된 '효과적 개발협력' 및 부산총회 이후의 이행체제, '새로운 포괄적 글로벌 파트너십'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부산총회의 성과 및 한계점을 분석한 후, 앞으로 한국 ODA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간략히 논의해 보았다.

부산총회 배경 및
목적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노력과 2000년에 수립된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후 MDGs)의 달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3년 제1차 원조에 관한 고위급회담(High Level Forum, HLF)이 로마에서 열렸으며, 2005년 제2차 회담이 파리에서 열렸다. 전세계 공여국, 다자기관 그리고 수원국들은 2005년 고위급회담의 결과인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 PD)을 통하여 주인의식, 원조일치, 원조조화, 성과중심의 원조, 상호 책임성이라는 5대원칙과 12개의 지표를 세워 2010년까지 달성하고자 하였다.

이후 파리선언의 이행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2006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친 OECD DAC의 모니터링 평가가 이루어 졌으며, 2008년 가나 아크라에서 열린 제3차 고위급회담에서는 아크라 행동강령(Accra Agenda for Action, AAA)을 통해 공여국과 다자기관, 수원국 뿐 아니라 시민사회가 개발협력의 중요한 주체로서 자리잡게 되었다. 2010년까지를 목표로 한 파리선언 5대 원칙의 이행결과를 평가하기 위해 2011년 마지막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마지막 고위급 회담인 세계개발원조총회(HLF-4)가 부산에서 열렸다.

이번 부산총회는 원조효과성을 넘어선 효과적 개발협력에 대해 논의하고, 모든 개발협력 주체를 포함한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약 3천여명이 참가한 개발원조 역사상 가장 큰 행사가 되었으며, 공여국 및 다자기관, 수원국, 시민사회, 민간기업과 의회 및 원조와 개발분야의 전문가 등 모든 개발협력의 주체들이 모이는 장이 되었다.

파리선언의 결과 및 평가

2006년과 2008년의 모니터링이 12개의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되었다면, 2011년 평가는 뚜렷한 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았던 지표 2b (신뢰할만한 수원국 공공 조달 시스템)와 지표 5b (수원국 공공 조달 시스템 활용)을 제외한 나머지 지표들을 모두 13개의 지표로 재정립하여 평가하였다. 그 결과 지표 4 (조율된 기술지원을 통한 역량강화)를 제외한 나머지 12개의 지표들은 모두 미달성의 결과를 보였다. 지표별 성과에 대한 자세한 요약은 개발협력 정책과 이슈 2호(2011.9월)에서 다룬적이 있으므로 이번 3호에서는 파리선언 이행 모니터링 최종평가에서 보여준 다음의 세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총체적 결과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공여국 및 다자기관과 수원국의 파리선언 이행정도 비교

공여국 및 다자기관과 수원국의 파리선언 이행의 전체적 성적을 보면 총 13개의 지표 중 한 개에서만 목표를 이루었고, 나머지 12개는 목표를 이루지 못하였다. 이러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2006년 첫 모니터링 평가와 2011년 마지막 평가를 비교했을 때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2006년과 비교하여 더 많은 수원국들이 안정적인 국가개발전략을 수립하였고, 더 높은 수준의 결과중심 프레임워크를 형성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수원국별 MDGs와 관련된 통계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역량개발’과 같은 부문에서의 노력 성과는 공여국과 수원국 간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공여국과 다자기관은 ‘조율된 기술지원을 위한 역량강화 (지표 4)’에 대한 목표는 이루었으나, 이는 수원국의 필요에 근거한 기술지원 이라기 보다는 공여국 중심의 지원인 경우가 많았다.

평가 결과 전체적으로 수원국의 파리선언 이행정도가 공여국의 이행정도에 비해 더 높았으나, 수원국내 원조 관련 이해당사자들은 공여국 정부가 부과한 제약에 대한 어려움을 표시했다. 이는 파리선언과 같은 국제적 움직임과 관련하여 수원국 뿐 아니라 공여국에게도 정치적 도전과 같다고 할 수 있다.

2. 수원국간 파리선언 이행정도 비교

파리선언 이행평가를 위한 모니터링은 2005년 이후 수원국들의 빈곤퇴치를 위한 노력의 향상 정도를 전반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데 반하여, 세계적 평균치가 아닌 국가간 목표달성을 위한 정도의 차이는 보여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비록 파리선언 이행을 위한 모니터링이 국가간 비교분석이 가능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있지는 않았으나, 수원국의 유형별 주요 차이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었다.

우선 취약국가 및 전쟁을 겪은 국가들은 특히 수원국의 국가개발전략과 결과중심의 프레임워크를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매우 낮은 달성도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이러한 국가들은 수원국 공공 재정관리 시스템의 활용

뿐만 아니라 질적 관리에 있어서도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로 인해 공여국들의 이러한 국가들의 ‘정부 시스템 활용도’ 역시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였고, 프로그램형 원조(Program-Based Approach, PBA)의 활용도 또한 제한적이었다.

또한, 중소득국(Middle Income Countries, MICs)과 저소득국(Low Income Countries, LICs) 그리고 고채무빈곤국(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HIPC) 간의 뚜렷한 양상도 발견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저소득국과 고채무빈곤국 사이에서는 원조의 비구속화가 어느 정도의 진전을 보이는 반면, 중소득국에서는 원조의 구속화 성향이 유지되고 있었다.

3. 공여국 및 다자기관간 파리선언 이행정도 비교

2011년 파리선언 이행결과 평가에서 수원국간 서로 다른 방향성을 보인 것과 같이, 공여국 간에도 행동변화에 있어서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각 공여국 원조기관 간의 비교분석이 가능한 것은 아니었지만, 대체적으로 공여국들의 파리선언 이행과 관련된 문제점과 행동변화의 차이점 등은 찾아볼 수 있었다.

그리고 공여국 간 파리선언 이행정도에 있어서 다른 양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공여국들이 수원국과의 원조일치를 위한 노력에 있어서는 향상된 모습을 보였다. 반면 양자공여국들은 원조의 비구속화에 있어서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으며, 원조조화를 위한 공여국들의 행동변화는 대체적으로 매우 느리다 할 수 있었다.

비록 2011년 모니터링에서 신흥공여국들의 평가는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남남협력이나 삼각협력과 같은 신흥공여국들의 원조형태가 역량개발을 위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도 발견할 수 있었다.

부산총회 결과문 (Busan Outcome Document, BOD)¹⁾

위와 같은 파리선언 이행결과를 바탕으로 한 2011년 부산총회에서 채택된 결과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4대 공동원칙과 이에 따른 행동방안

공여국, 수원국, 다자기관 및 공공기관, 시민사회, 민간기업, 의회 및 지역기구들은 부산총회의 결과문서를 통해 새로운 파트너십에 의한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공동원칙과 목표를 강조하였다. 또한 2015년 목표인 MDGs의 달성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번 부산결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4대 공동원칙과 그에 따른 4가지 행동방안을 제시하였다.

[표 1. 2011 부산총회에서 채택된 4대 공동원칙과 행동방안]

4대 공동원칙	공동원칙에 따른 행동방안
개발 우선과제에 대한 개발도상국 ²⁾ 의 주인의식 (Ownership of Development Priorities by Developing Countries)	개발정책 및 절차의 민주적 주인의식 심화, 확대, 운용
결과중심 (Focus on Results)	구체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성과를 위한 노력 강화
포용적 개발 파트너십 (Inclusive Development Partnerships)	남남협력 및 삼각협력에 대한 지원 확대
투명성 및 상호책임성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to Each Other)	개발도상국의 다양한 개발자원 활용 및 개발협력 활동의 개발에 대한 촉매적 역할 지원

▶ 출처 | 저자 작성, 참고 | OECD, 2011b

국제사회는 부산선언의 4대 공동원칙과 행동방안 이행을 위하여 2012년 6월까지 소수의 선택적 평가지표를 개발하기로 결의하였다.

2. 변화 실현을 위한 보완적 행동방안

부산결과문에서 개발협력 주체들은 위와 같은 4대 공동원칙과 그에 따른 행동방안 이외에 2015년 MDGs 달성을 향한 효과적 개발을 위해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그 변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수적인 행동방안이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① 공동원칙 및 차별화된 공약들 중심으로 국제원조체계 (Aid Architecture) 의 새로운 개발주체 포용

북남(North-South) 패러다임에서 시작한 국제 개발협력의 구조는 오늘날 부상하는 남남(South-South) 개발협력으로 인해 새로운 개발주체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파리선언에서는 복잡한 국제원조체계에서 새로운 개발주체에 대한 논의가 없었고, 아크라 행동강령을 통해 신흥공여국 및 시민사회 등 새로운 참여자들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금번 부산총회에서는 포괄적 개발 아젠다 형성을 위해 이런 새로운 참여자들을 논의에 포함시킴으로써, 남북협력과 남남협력의 차별성 및 보완성 그리고 공동원칙 및 차별화 된 행동을 인정하였다.

② 개발협력의 질과 효과성 향상

파리선언과 아크라 행동강령을 통해 약속된 공약들이 원조의 질적 향상과 투명성 그리고 개발협력의 효과성 제고에는 기여하였으나, 효과적 개발을 위해서는 아직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부산총회를 통하여 그동안의 전통적인 원조 관계자들 뿐 아니라, 남남협력, 삼각협력 및 시민사회 등이 모두 함께 파리선언과 아크라 행동강령의 뜻을 이어 부산에서 채택된 공동원칙들에 대한 공약을 확실히 하고, 그 공약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위급 정치적 리더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부산선언에서는 파리선언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여 지속적인 결과를 중심으로 한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의 효과성 향상에 필요한 변화를 촉구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는 앞으로 1) 주인의식, 결과 및 책임성 강화, 2) 투명하고 책임 있는 협력, 3) 분쟁 및 취약한 상황에서의 지속가능한 개발의 촉진, 4) 재난 상황에서의 복원력 강화 및 취약성 감소를 위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3. 효과적 원조에서 효과적 개발을 위한 협력으로

부산총회에서는 원조만이 개발을 위한 해답이라는 관점을 벗어나 더 광범위한 의미로써 효과적 개발에 대해 논의하면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포함한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개발은 강력하고 지속가능하며 포용적 성장에 의해 주도되어야 한다.
- 정부가 소유한 자원은 개발에 필요한 재정에 더 많은 역할을 담당한다. 이로써 정부는 달성한 개발 성과에 대해 국민들에게 좀 더 많은 책임을 질 수 있다.
- 효과적 정부 및 비정부기관은 자체적 개혁을 설계 및 실행하고 서로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 개발도상국은 세계경제에서 보다 나은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형성하면서 점차적으로 지역적 그리고 세계적으로 통합된다.

이 프레임워크를 통해 국제사회는 앞으로 원조가 어디에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에 대해 재고해야 하며, 원조가 국제적으로 동의된 권리, 규범 및 기준과 일치하여 개발을 위한 촉매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부산총회 결과문은 효과적 제도와 정책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수요건이라고 강조하면서, 개발도상국은 지역적 특성과 각기 다른 단계의 개발을 수용하며 효과적 제도 강화를 위한 노력을 주도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와 관련하여 공여국 및 수원국의 정상들은 개발도상국의 효과적 제도 설립을 위하여 개발협력의 주체들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합의하였다.

- 개발도상국에 의해 주도된 제도적 · 정치적 변화 실행 지원
- 개발도상국에 의해 주도된 국가기관(institutions), 제도(systems) 및 역량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
- 정책입안, 이행 및 책임을 보여줄 수 있는 개발도상국에 의해 주도된 제도적 성과 향상 결과에 대한 발전 지원
- 제도개혁, 지역 및 국제적 차원에서의 지식 및 경험의 교류를 위한 성공 요인(determinants)에 대한 학습(learning) 심화

부산결과문서에 담긴 효과적인 개발을 위한 협력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남남협력 및 삼각협력

부산총회에서는 아크라 행동강령을 통해 대두된 남남협력과 삼각협력을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잠재적 요소로 정의하고 있다. 즉, 지속가능한 개발에 있어서 재정적 협력을 넘어선 지식 및 개발경험의 공유가 모든 관계자들 및 국가들에게 중요하며, 남남협력과 삼각협력이 개발도상국의 국가적 맥락에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지식공유와 상호학습을 강화하기 위해 개발협력 주체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 적절한 상황에서, 개발협력으로의 삼각협력 방법 이용 증진
- 남남협력과 삼각협력에 대한 더욱 활발한 이용
- 개발도상국에 의한 중요한 지식풀(knowledge pools)로의 접근성 강화수단으로써 남남협력 주체간 지식교류, 상호학습(peer learning) 및 협력 네트워크 개발 장려
- 남남협력과 삼각협력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역 및 국가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 지원

② 민간부문과 개발

부산총회에서는 남남협력 및 삼각협력에 대해 아크라 고위급회담과 비교하여 좀 더 심도있게 다루고 있을 뿐 아니라, 개발에 있어서 민간분야의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특히 혁신 주도, 부와 소득 및 일자리 창출, 국내 재원의 동원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로 인한 빈곤퇴치에 있어서 민간부문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부산결과문은 개발협력에서 민간분야 역할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위해 노력할 것을 결의하였다.

- 민간투자 개발을 위한 법적, 규제적, 행정적 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한 비즈니스 협회 및 노동조합 등의 대표들과의 연계(engage) 및 민간부문 개발, 증가된 외국인 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민관 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가치 사슬(value chain)의 강화 등을 위한 건전한 정책 및 규제적 환경 보장
- 지속가능한 성장과 빈곤 퇴치를 위한 개발 정책과 전략의 설립 및 이행 단계에서 민간분야의 참여 확대
- 공동의 개발목표를 위한 민간재원을 동원하기 위한 혁신적 금융체계의 발전 심화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장려
- 개발과 사업성과(business outcomes)를 증진시키는 방법 모색을 통해 상호 보장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민·관 분야의 대표 및 관련 기관의 대표를 개발협력의 주체로 참여 장려(invite)

③ 부패 및 불법적 흐름(illicit flows)의 방지

부패는 세계적으로 개발을 저하시키는 심각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부산총회 결과문에 동의한 국가들은 특히, 유엔반부패협약(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및 OECD뇌물방지협약(OECD Anti-Bribery Convention)과 같은 국제협정과 일관된 부패와 불법자금을 방지하는 노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의 이행을 위한 노력에 합의하였다.

- 반부패 법 강화 및 부패한 행동에 대한 무관용의 문화 축진을 통한 부패근절 공약에 대한 충실한 이행
- 자금세탁방지 조치(measures) 강화, 조세회피에 대한 자제 촉구, 불법자산에 대한 추적, 동결 및 회수를 위한 국가적·국제적 정책, 법적 프레임워크 및 제도적 장치 강화 등의 불법자금 방지를 위한 각각의 노력 가속화

④ 기후변화 재원

부산총회에서는 기존의 고위급회담에서 중요시 하지 않았던 국제 기후변화 재원(finance)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개발협력의 주체들은

효과적인 기후 재원 및 넓은 의미의 개발협력을 위하여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포함한 일관성, 투명성 그리고 예측성을 고려한 노력을 촉구하기로 하였다.

- 개발도상국의 전체 국가개발계획의 필수적인 부분으로의 국가 기후변화 정책 및 계획에 대한 지원 지속
- 기후 활동 참여 주체들과의 개발 효과성과 관련된 교훈 공유 지속

4. MDGs 목표달성 및 그 이후의 발전을 위한 협력

개발협력의 주체로서 부산총회 결과문서에 합의한 국가들은 앞으로 파리선언 및 아크라 행동강령의 원칙들과 함께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할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파리선언 및 아크라 행동강령 이행평가는 OECD의 주도하에 이루어졌으나, 부산총회에서 합의된 내용에 대한 이행 모니터링과 평가는 OECD 외에 유엔 개발협력포럼(UN Development Cooperation Forum, 이후 UN DCF)이 자문역할을 할 것이다.

[표 2. 부산총회 이후의 이행체제(Post-Busan Mechanism)]

파리선언, 아크라 행동강령, 부산총회 이행을 위한 공약

- 개발도상국 주도의 이행 프레임워크 구축 및 발전결과 공개
- Post-MDGs 프레임워크를 포함한 부산 공약 이행을 위한 선택적 평가지표 개발 (개발목표 : 2012년 6월까지)
- 모니터링 역량 강화 및 개발효과성 향상 노력을 평가하는 개발도상국 주도의 이니셔티브 지원

부산총회 이후 새로운 협력체제를 위한 이행방안

- 새롭고 포괄적인 '효과적 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구축
- 2012년 6월까지 글로벌 파트너십을 위한 가벼운(light) 형태의 운영방안에 대해 합의
- 2012년 6월에 설립될 새로운 체계 및 기존의 OECD 원조효과작업반 (Working Party on Aid Effectiveness, WP-EFF)의 역할 마무리, 그리고 글로벌 파트너십을 위한 잠정적 결정 및 부산결과문 지지
- 글로벌 파트너십의 효과적 기능 지원을 위한 OECD와 UNDP 협력 장려

▶ 출처 | 저자 작성, 참고 | OECD, 2011b

부산총회의 성과

이번 부산총회는 공여국과 수원국 모두의 의사 결정자들로 하여금 MDGs를 위한 성과를 최대화하고, 부산총회 이후의 효과적 개발을 위한 국제 개발협력 프레임워크에 동의하고 참여하는 기회가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부산회의는 다음과 같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1. 정치적 선언문 (Political Statement) 채택

파리선언 및 아크라 행동강령 모두가 정치적 공약을 중심으로 구체적 행동 계획에 따른 국가적 이행을 필요로 한 만큼, 부산총회 역시 160여 개 공여국과 수원국 고위급 대표자들의 정치적 공약이 중요시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부산총회 결과문서 및 정치적 선언문의 채택은 참여 국가들의 정치적 지지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2. 새로운 개발주체의 적극적 참여 및 실질적 공약가능한 합의를 도출

비록 파리선언이 수원국 및 공여국간 공동 비전을 구축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는 하지만 개발협력에서 그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새로운 주체들에 대한 참여는 고려하지 않았었다. 또한 2008년에 열렸던 제3차 고위급회담의 결과인 아크라 행동강령 도출에 있어서 비구속성, 투명성, 중기예측성, 분절화 관련 조항에 대해 최종문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금번 부산총회에서는 합의도출이 가능한 전반적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였고, 신흥공여국 등 모든 참여국의 다양성 및 상호보완성을 인정하여 모든 참가국이 부산결과문에 합의하도록 하였다. 그 외에 시민사회 및 민간분야 그리고 의회와 같은 개발주체들도 부산이후의 아젠다 생성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효과적 제도, 민간기업 기여, 여성 역량 강화 등의 아젠다를 부산결과문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3. OECD와 UN 연계 체제로의 전환

부산총회 이후의 이행체제는 OECD만의 주도가 아닌 UNDP 및 UN DCF와의 연계체제로 전환 될 것이다. 즉, 금번 부산총회를 계기로 OECD 중심의 원조효과성에 관한 고위급포럼은 막을 내리고, 앞으로는 부산총회에서 이루어진 합의내용의 이행 및 MDGs 목표달성 평가에 있어서 OECD 뿐 아니라 UN이 함께 연계하여 노력하도록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부산총회의 한계

한국이 부산총회 개최국이 되면서 한국정부는 ‘개발효과성’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국제사회는 그동안 논의되었던 원조효과성을 넘어선 포괄적 의미의 ‘효과적 개발협력’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금번 부산총회는 개발효과성 또는 효과적 개발협력에 대한 사전 정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따라서

국제사회가 2012년 6월까지 부산 공약 이행을 위한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개발효과성 또는 효과적 개발협력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새로운 포용적 글로벌 파트너십’이 과연 얼마나 효율성이 있을지, 그리고 새로운 파트너십이 어떠한 방식으로 개발효과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한국 ODA에 대한 시사점³⁾

1. 부산이후 모니터링 지표 개발과정에서 한국의 원조사업 현실 반영 노력 및 국내 원조 관련 제도 및 정책 강화 필요

비록 부산총회가 어떠한 방식으로 개발효과성을 향상시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으나, 2012년 6월에 있을 장관급 회의에서 파리선언 및 아크라 행동강령을 근간으로 한 부산 공약 이행 모니터링 및 평가에 대해 논의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한국정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효과적 개발협력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은 파리선언 모니터링에 참가한 23개 양자공여국 중 이태리, 스위스, 터키 그리고 미국과 함께 파리선언 이행 결과 최하위 점수를 기록하였다. 파리선언 이행 결과에 있어서 한국의 점수가 매우 낮은 주요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라 할 수 있다.

첫째, 5대원칙과 13개 지표들이 선진공여국의 원조시스템을 기준으로 개발되었다는 점이다. 그 결과, 한국과 같이 선진공여국과 다른 원조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공여국은 파리선언 이후 5년이라는 기간 동안 파리선언을 이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둘째, 2005년 파리선언 이후 한국 정부 및 관련부처 정책결정자들 그리고 실무자들의 원조효과성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하였고, 특히 파리선언에서 제시된 13개의 지표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하였다. 이는 비단 한국만의 경우가 아니라 다른 몇몇 공여국 또한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듯, 한국의 원조사업 현실에 대한 국제사회의 고려가 미흡하고, 또한 국내적으로 국제사회가 제시한 원칙과 지표에 대한 이해가 미흡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정부는 앞으로 있을 장관급 회의에 대비하여 한국 원조사업의 현실을 국제사회에 이해시키고, 동시에 한국 원조시스템과 제도 및 정책을 국제사회가 제시하고 있는 기준 및 지표 등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범정부적 원조 중기지원전략을 수립하여 정책일관성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국은 최근 특히 강조하고 있는 원조선진화를 통해 부산총회에서 합의된 4대 공동원칙 및 앞으로 개발될 지표에 대한 충실한 이행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2.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력

부산총회에서 강조된 사항 중 하나는 투명성 강화이다. 부산총회 이전에도 투명성에 대해 논의된 적이 있으나, 원조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미흡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부산총회를 계기로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수립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고, 특히 각국의 국제투명성기구(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 이후 IATI)로의 가입여부가 주목되었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도 원조기관의 정보공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고, 이미 여러 선진공여국이 IATI에 가입함으로써 원조에 대한 정보(data)를 공개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국정부도 IATI 가입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하며, 특히 예산공개를 통한 원조의 예측성 향상 등의 정보 공개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3. 최빈국 및 취약국 지원 강화

파리선언 이행결과를 바탕으로 부산총회에서는 최빈국을 포함한 취약국에 대한 지원을 권장하였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국제사회에서 논의된 최빈국 및 취약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빈국 및 취약국의 거버넌스 및 원조관리 시스템 등이 취약한 점을 고려하여 원조재원 관리 및 지속가능한 개발의 역량 강화 등에 중점을 둔 별도의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작성 | ODA연구실 임소진 상임연구원(sjlim@koica.go.kr) _ 2011. 12. 16

- 1) 2011년 12월 현재 공식적인 부산총회 국문번역본이 발간되지 않았으며, 본 글에서 쓰인 부산총회와 관련된 국문번역은 저자의 의견임을 밝혀둔다.
- 2) 파리선언 및 아크라 행동강령에서는 수원국을 파트너국(partner countries)이라 명시한데 반하여, 부산총회 결과문에서는 개발도상국(developing countries)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 3) 부산총회 결과와 관련한 KOICA 사업으로의 과제에 대한 내용은 동 기관 발행의 '국제개발협력지 제4호(2011.12월)' 참고.

참고 문헌

Abdel-Malek, T. and B. Koenders (2011).

Progress towards More Effective Aid: What Does the Evidence Show?

Lim, S. (2011).

Western Inspired Paris Declaration: What Works and What Doesn't. Working Paper No. 4, Manchester: Centre for Organisations in Development.

OECD (2005).

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

OECD (2008).

Accra Agenda for Action.

OECD (2011a).

Aid Effectiveness 2005-10: Progress in Implementing the Paris Declaration.

OECD (2011b).

Busan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OECD (2011c).

Meeting of the Group of HLF4 Outcome Document Sherpas Draft Summary Record of the First Meeting. OECD-DCD/DAC/EFF/M(2011)4/PROV.

Wood, B., J. Betts, F. Etta, J. Gayfer, D. Kabell, N. Ngwira, F. Sagasti and M. Samaranayake (2011).

The Evaluation of the Paris Declaration, Final Report. Copenhagen, Danish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udies.